‘미니 전국 선거’로 떠오른 10월 재선거

민주당 김종률 의원직 상실 … 5곳으로 늘어

호남 제외 전국서 실시… MB정부 중간평가 될 듯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24일 단국대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도 10월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에 추가로 포함됐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날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있던 2003년 학교 이전사업 시행사가 되려는 S사로부터 사업자가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이전 사업에 참여하려는 C사에서 각종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한 18대 국회의원은 15명으로 늘었으며 10월 재선거 지역은 경기도 안산·상록을과 수원 장안, 경남 양산, 강원 강릉을 포함해 총 5곳으로 늘었다.

또 지역분포상 수도권과 영남, 충청, 강원 등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골고루 재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이번 선거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미니 전국선거’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세종시 문제가 최대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충청 지역에서 재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수도권과 함께 충청지역이 여야간 최대 접전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벌써 재선거의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선거를 말 그대로 결원을 보충하는 재보선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 중간심판론’ 카드로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또 예비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에는 한나라당에서 지난해 18대 총선 공천을 신청했던 경대수 전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경회 지역 당협위원장,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현일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 등, 민주당에선 정범구 전 의원과 방용석 전 노동장관, 이재정 전 통일장관 등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수원 장안 후보로 ‘장 상 최고위원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장 최고위원이 이화여대 총장을 거쳐 국민의 정부 시절 첫 여성총리 후보로 지명될 정도의 화려한 경력이 있는 만큼 인지도면에선 어떤 중량급 정치인에 뒤지지 않는다는 게 급부상의 배경이다.

실제로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최근 수원 장안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0%대의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에서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찬숙 전 의원과의 가상대결 결과 지지율 차이는 한자릿수 내였고, 적합도 면에선 오차범위까지 육박했다는 후문이다.

손 전 대표를 제외하곤 민주당 후보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중부동 민주당 송인배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해찬 전 국무총리, 송인배 후보, 안희정 최고위원, 최철국 의원(오른쪽부터) 등이 서로 손을 잡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명절 연휴 4일 보장법’ 만든다

“주말·휴일 겹칠땐 휴무 하루 연장 귀성 불편 해소”

민주당은 현재 사흘간 쉬도록 한 추석과 설 연휴가 주말과 겹칠 경우 휴무일을 하루 연장, 나흘간 쉴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24일 민주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인 박은수 의원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추석과 설이 토, 일요일에 걸렸을 때 연휴가 3일 밖에 되지 않아 이동에 혼란이 많고 귀성을 포기하는 서민들도 많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이 참 서민 행보 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이 법안은 음력 1월1일인 설과 음력 8월 15일인 추석이 토요일이면 그 주 목요일을, 일요일이면 그 다음 주 화요일을 각각 법정 공휴일로 지정, 최소 4일간 쉬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짧은 휴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면서 고향을 못 가고 잔업을 하는 서민이 특근수당을 받도록 하는 창의적 민생입법”이라면서 “실제 늘어나는 휴일은 하루, 이틀 정도여서 재계와 여당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故 노 전 대통령 생가 복원… 일반 개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가 24일 오후 복원식을 갖고 일반에 개방됐다.

노 전 대통령의 묘역과 생가관리를 담당하는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이사장 권양숙)는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생가 앞 마당에서 복원식을 가졌다.

이날 복원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난 2월부터 9억8천만원을 들여 복원한 노 전 대통령의 생가는 본채(건축 면적 37.26㎡)와 아래채(14.58㎡)로 이뤄져 있다.

또한, 생가 바로 옆에는 지상 1층, 지하 1층의 쉼터(185.86㎡)도 준공돼 이날부터 봉하재단이 노 전 대통령의 기념품과 회고록 등을 판매하는 ‘아름다운 봉하가게’로 운영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운찬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라”

야권, ‘인준 불가’ 총공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야권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24일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정 후보자를 ‘대통령의 하수인’, ‘방탄총리’, ‘식물총리’, ‘반신불수’라고 지칭하는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최종적으로 임명돼도 이명박 대통령의 하수인이나 방탄 총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정 후보자는 인준이 돼도 결국 식물총리가 될 것”이라며 “본인과 국민, 국가를 위해서도 용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최고위원과 당5역 연석회의에서 “청문회에서 그의 언행을 보니 국무총리는 정 지명자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고 비판했고,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총리 자리에 매달리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양당은 28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방안과 함께 항의의 표시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퇴장하거나 실력저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실력저지의 경우 ‘정치 공세’라는 역풍을 우려,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당분간 당 총리인사청문TF를 유지하며 기업체 고문 겸직, ‘제3의 수입’ 의혹 등 청문회에서 해명이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발됐다.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의화)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 및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귀남 보고서 채택 무산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간 이견으로 끝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해 채택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난 8일로부터 20일째가 되는 오는 27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있다.

/연합뉴스